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대

기고

김관식

시인·문학평론가



예로부터 호남인은 정의감과 의협심이 강한 행동을 보여 왔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서 싸웠고, 한말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분을 참지 못해 의병항쟁에 앞장섰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말은 호남의 중요성과 호남인의 기질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다.

현재 삼한지 테마파크 주몽 드라마 세트장 부지가 있는 영산강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호남인이 숙원이었던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이 들어선다. 2025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진행 중이다. 이미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의 설계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으로 독일 주현제 바우쿠스트(Hyunjejoou_Baukunst) 건축사무소의 ‘은유의 장소’를 뽑았는데, 영산강변의 자연환경을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국제인 감각을 최대한 살린 설계라고 한다.

이미 전남도는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에 전시할 관련 유물, 자료 2694점을 확보해놓았다고 한다. 호남의 의병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한 자료들이 모두 구비된 박물관으로 계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한 소장자들의 기증을 받아 손색이 없는 박물관으로 꾸며, 앞으로 미래세대들에게 내 고장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의병들의 애국애족정신의 산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예부터 나주는 전라도의 중심지였다. 전라도라는

남말이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겨났듯이 남도의 중심지에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이 들어선 것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이 들어서는 나주는 역사적으로 영산강과 나주평야가 펼쳐져 곡창지대로 산물이 풍부한 고장이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 장군과 거북선을 만드신 나대용 장군이 태어난 곳이고, 광주학생운동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은 왜적이 우리 땅을 짓밟을 때, 내 고장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운 의병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역사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의병관련 유물이나 자료들이 박물관에 전시되도록 더 많은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데, 호남인 모두가 다 같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첨단 전자과학 기술과 인근의 일제강점기 일본이 남긴 침략 현장과 연계한 명실교육 생생한 역사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한말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병활동에 참가하여 일본 경찰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상해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들을 일본의 침략에 꾸준히 항전했었다. 그런 반면에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호리 호식하는 악삭빠른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많은 재물을 모아 평평거리고 후손들까지 기회주의 습성을 대물림했으나 척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런 물염치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건 있어왔다.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들

이 바로 나라의 힘을 약하게 하는 암적인 족속들이다. 따라서 이런 이중인격자들이 많은 사회는 남의 나라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이런 물염치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뿌리 교육의 장소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애국애족을 생활하며 살아온 의병들과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이 들어서는 자리는 바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인 금을 수탈해갔던 폐광이 된 덕읍광산이 있던 곳이다. 현재까지 장항제련소를 광석을 실어 나르기 위해 파놓은 산을 관통하여 영산강변까지 지하 바위굴이 그대로 남아 있고, 폐광은 금강토굴이라고 하여 젓갈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자기네 나라 신을 모신 신사가 박물관 주차장 부근에 있었다고 전한다.

따라서 단순히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설계가 영산강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 국제적인 감각을 살렸다고 하지만, 외형 못지않게 내실이 있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 침략을 실증할 수 있는 인근의 침략 유적, 유물을 복원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내부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록영화 상영관이나 당시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사진 및 영상 자료. 관련 도서 등을 두루 비치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목적의 미래세대를 위한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의 산 교육의 장소로 알찬 박물관으로 꾸며질 기대한다.

社說

‘주민조례 발안’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법 시행 1년 광주·전남 0건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주민 조례 제정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지방행정에 생기를 불어 넣고 ‘주민주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전남 시·도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주민조례법 시행 이후 시·도 주민 조례 제정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주민조례법을 통해 서명 인원 등 청구권자 기준을 낮췄지만 여전히 기준 조건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지원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2건의 주민 조례가 신청됐지만 2건 모두 서명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반려되거나 각하됐다. 주민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150분의 서명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광주 8034명, 전남 1만498명이다. 특별히

관심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기준이다.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관련 규정이 마련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청구 요건이 완화되면서 주민자치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간소화 된 요건으로 주민조례발안의 한층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주민이 스스로 현안을 풀어나가는 ‘행정의 꽃’이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주민자치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집행부나 의회가 외면하는 분야를 공론화 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다. 시민의 참여야말로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주민주권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순향’ 고향사랑기부제 지속가능성 고민을

시행 한달... 확장성 높여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 여수, 해남, 영광군 등 몇몇 지자체의 경우 시행 한달간 200명의 기부자가 나오고 있어서다. 전남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결과,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중심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가수 남진은 고향인 목포에, 축구 국가대표인 나상호는 고향 담양에, 해남에 연고가 있는 도올 김용옥 선생은 해남에 각각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전국을 버스로 돌며 어르신과 소통하는 ‘국민안대양’ 김정연 씨가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한 달간 205명이 전남도의 기부자로 나섰다. 기부자 특성도 드러나고 있다. 기부자 상당수는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고, 기부금액도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원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과 기업인, 전문직 종사자가 기부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했고, 나머지 절대 다수(90% 이상)는 기부 하한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경제 침체와 고물가시대인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동참 열기는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가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리는데 있는 점에서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 지자체들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발굴에만 매몰되어서는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실제 답례품이 기부 실행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서다. 지자체들은 한 달간의 성적표를 면밀하게 분석해 기부자의 자발적 선택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들이 낸 기부금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을 펼칠 계획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이번주 일요일은 음력 정월 대보름이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정월대보름을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여겼다. 부럼깨기, 귀밝이술, 오곡밥과 볶음나물, 더위팔기, 쥐불놀이, 지신밟기 등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통 세시풍속이 행해진 것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풍속들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체 붕괴가 진행되면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는 중이다.

대보름 풍속인 당산제(堂山祭)도 그중 하나다. 당산제는 전남지역 농촌마을의 경우 보름날 마을 수호신이 있는 당산에서 마을 전체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지낸 것을 말한다.

어릴적 고향 당산은 수령이 수백년된 당산나무(수종 느티나무) 3~4그루가 있었고 계기를 놓여둔 당집과 정자 등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기억이 아련하다. 특히 마을 수호신으로 제사의 대상이 된 당산나무(당산림)는 당산제를 지낼때까지는 신성시되어 나무에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의 접근조차도 마을에서 금했다. 여름철에는 넓고도 깊은 녹음(畝)을 제공해 온 마을 사람들의 피서지로 사랑을 받았다.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농

당산림의 세계화

손을 떠나 도시로 물리는 이촌향도 현상이 전국을 휩쓸면서 당산제도 명맥이 끊겼다. 이후 마을 이장의 독단으로 당산 부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당산내 정자는 살림집으로 용도가 바뀌었고, 이를 알아차린듯 당산나무도 차례로 고사해버렸다. 수 백년동안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당산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데 신안군이 섬 지역 당산림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렸다. 군이 당산림의 신앙심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여겨져서다. 당산나무가 마을 자연경관을 드높이는 존재이면서 생태, 문화,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보물’이라는 현재적 인식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군은 우수한 당산림 자원을 발굴해 보존·관리하고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내 당산림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디 신안군의 담대한 군정 목표가 달성되어 타 지자체로 널리 확대되기를 바란다. 당산림은 인간이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더불어 숲’의 전형으로 이를 살리는 일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지역 농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기수 논설실장 kisoo.lee@jnilbo.com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